

다문화사회, 한국의 통일

: 정체(政體)의 통일에서 생활(生活)의 통합으로

이용재(대구가톨릭대학교)

논문 요약

보편성에 대한 반성적 성찰은 다양성에 대한 새로운 욕구를 드러내고, 민족국가의 국경은 낮아짐에도 민족개념은 여전히 유효하다. 오늘날 다문화사회통합에 대한 논의는 민족적 동질성이 아니라 다양성과 이질성에 기초한 새로운 연대의 방식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남북통일에 대한 국민 인식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럼에도 통일정책은 정치체제의 대립과 갈등에 기초한 공약(公約)으로 존재한다. 오늘날 국제사회와 국민의식, 민족문화에 대한 성찰은 통일정책이 경제적 통일이 아니라 다문화 생활세계의 통합이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자신의 삶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는 것에 무관심한 젊은 세대들과 이념보다는 생활 속의 안전과 안정에 더 민감한 현실은 새로운 통일정책을 요구하고 있다. 이 글은 그것이 이념의 대립과 극복이 아니라 다문화사회통합의 방식에서 제시하는 생활세계에서의 소통과 수용의 방식에 기초한 통일정책이라고 주장한다.

주제어 : 다문화사회, 통일정책, 통일교육, 경제적 통일, 생활적 통합

I. 서론

오늘날 한국사회는 다양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일제 강점기와 한국전쟁의 경험을 통해 해체되기 시작한 전통적 사회윤리와 사회구조는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빠른 경제성장과 근대화산업화의 결과로 더욱 빠르게 해체되고 있다. 상부상조와 가족부양에 기초한 안전망을 대신해 복지국가라는 사회적 안전망이 제시되었지만, 아직까지 복지국가의 경험이 부족한 한국정부에서 전통적 공동체가 담당하고 있던 안전망까지 대체하기에는 그 역량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IMF의 경험이 국민의 삶 속에 각인되어 있듯이 신자유주의 이념 하에 세계 경제는 효율성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로 통합되고 있으며, 그 속에는 이미 출발선이 다른 여러 경쟁자들이 동일한 규칙에 따라 함께 경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 결과 빈곤을 비롯한 사회적 불평등은 심화되고 있으며, 사회적 안전망을 위한 비용지출은 주저되고 있다. 누군가에게는 '기회의 균등'으로 보이는 상황이 누군가에게는 '그림의 떡'일 수도 있다는 것이 더 이상 우리에게 생소한 이야기는 아니다. 이러한 우리의 현실 인식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한국은 근대화를 이루고자 하는 국가들에게는 '기회의 땅'으로 비쳐지고 있다. 한 사회 내에서의 구조적 절망과 개인적 희망이 함께 공존하는 한국 현실에서 '통일'은 남북의 문제를 넘어 또 다른 과제를 부여하고 있다.

신자유주의에 기초한 세계단일시장화는 이윤을 찾아 국경을 넘는 자본과 일 자리를 찾아 국경을 넘는 노동력(자)의 이동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세계화 혹은 지구촌이라는 단어는 이제 우리에게 친숙한 단어가 되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2014년 9월 통계월보에 따르면 2014년 8월 현재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체류외국인은 1,710,896명으로 2013년 8월 1,546,325명에 비해 164,571명(10.64%)정도 증가하였다. 이와 함께 국내에 체류하는 북한이탈주민 또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1990년대 북한 내 식량난 발생 이후에 북한주민의 생존형 탈북이 증가하면서 2002년부터는 연간 1천 명 이상의 탈북자가 발생하고 있다.

2014년 7월 통일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의 국내입국 규모는 1998년 이후 매년 꾸준한 증가추세에 있어 2014년 6월까지의 잠정 입국인원은 26,850여명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0~10세는 1,152명이며 10~19세는 3,229명, 20~29세는 7,339명, 30~39세 7,890명, 40~49세 4,249명, 50~59세 1,353명, 60세 이상은 1,156명으로 대부분 경제활동을 하며 한국에 정착해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다.

한국사회를 지탱하고 있던 전통적 사회구조와 규범 그리고 문화들이 사라지고, 이를 대체할 새로운 근대적 사회구조와 규범, 문화의 형성이 지체되고 있다. 그 공백을 한국사회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자본주의 소비문화가 대체하면서 사회구조의 균열이 가속화되고 있다. 또한 정치경제사회적 양극화의 심화와 북한이탈주민을 포함한 이주민의 증가는 새로운 사회통합정책을 요구하고 있다. 이제 그 연장선에서 다문화정책과 통일정책을 바라봐야 한다. 2005년 이후 학문적 관심이 제기되기 시작했고, 2008년 제1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과 다문화가족지원법을 통해 확립된 다문화정책은 외국인노동자와 국제결혼이 증가되면서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 특히 국가적 규모에 비해 과도한 경쟁구조와 출산을 저하에 따른 외국인 노동력 수급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국제결혼에 따른 새로운 국민의 유입은 정부차원에서 다문화정책을 본격적으로 실시하게 하였다. 비록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민족주의에 대한 비판적 이론이 득세하고, 우리 사회 구성원 가운데 외국인이 급증하면서 우리 사회에서의 순혈주의에 근거한 민족담론은 점차 그 위력을 소진하고 있다¹⁾고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동화주의를 극복하고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공존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다문화정책은 다민족다문화다언어의 공존이라는 측면에서 단일민족주의에 기초한 통일정책과 충돌하고 있다.

따라서 다문화교육을 통일교육과정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민족주의를 재검토해야 할 필요성과 민족정체성을 강조해야 할 필요성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분단극복을 위한 통일정책의 측면에서 민족정체성은 중요한 교육이념이다. 이러한 고민은 이주의 증가와 세계화 현상에 대응해 사회통합정책으로 다문화정책을 제시하였던 호주, 네덜란드, 영국, 미국 등에서도 제기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일정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다양성에 기초한 사회통합정책으로 다문화정책과 단일성에 기초한 사회통합정책으로서 국가정체성 문제는 서로 갈등한다. 한국의 상황에서도 다문화주의는 분단이라는 구조적 갈등상황과 통일 그리고 그 이후의 사회통합이라는 국가적 과제와 상충되어 공동체의 통합력 증진에 기여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더욱이 생존경쟁이 치열한 한국의 상황에서 다문화정책이 제시하는 문화심라의식 중심의 접근은 소수집단에게 중요한 노동과 직업의 문제를 등한시하는 문제를 발생시키기도 한다. 또한 이주 집단의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인정은 집단 내부의 성별위계 및 권력위계 등에 대한 국가적 대처를 어렵게 할 수도 있다. 다수집단과 소수집단의 관계는 개별 인간의 상황과 조건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고, 한 집단 내부에서도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등 상대적이기 때문이다.²⁾ 이처럼 한국의 다문화주의 정책은 분단 상황이라는 한반도의 특수성과 총체적 지향을 가진 독창적인 정책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로 인해, 국가사회적 갈등을 치유하는 정책으로서의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지 못하다.

통일 이후 한국은 다문화사회가 될 것이다. 1948년 분단 이후 60년이 넘는 시간동안 서로 다른 정치이념과 경제체제 하에 다른 길을 걸어온 남북한의 모습은 정치·경제·사회·문화적으로 서로 이질적 모습으로 다가설 것이다. 그러므로 다양성 속에서 국가정체성과 연대의식을 확립하고 새로운 통일성에 기초한 국가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과정은 다문화사회 사회통합의 과정과 맥락을 같이 할 것이다. 이것이 오늘날 다문화사회 한국의 통일방식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이유다. 그러므로 이념대립이 사라지고 정치경제적 상황변화에 따라 급변하는

1) 추병완, "다문화사회에서 학교통일교육의 새 활로." 『교육과정평가연구』 제14권 제1호, 2011, p. 57.

2) 박영자, "다문화시대 한반도 통일통합의 가치 및 정책방향: 상호문화주의의 시각과 교훈을 중심으로." 『국제관계연구』 제17권 제1호, 2012, p. 303.

국제정세와 사회양극화로 인해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이해관계를 서로 달리하는 계층분화의 심화 속에서 남북통일이라는 새로운 과제를 안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반영하는 통일정책은 '단일성의 회복으로서 통일'이 아니라 '다양성 속의 통일'이라는 시각을 반영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특수성에 기초한 보편성의 회복이라는 측면에서 단일성과 다양성 그리고 동화와 인정을 수렴하는 다문화주의에 기초한 사회통합정책이어야 한다.

통일 환경과 통일에 대한 요구는 점차 변화한다. 따라서 우리는 이념과 현실, 정책에서 서로 중첩되는 영역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실천적 삶의 모습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정치체제와 이념의 동화가 아니라 삶의 모습 그 자체에 존재하는 차이에 대한 인정을 바탕으로 구체적 삶의 모습에 주목해야 한다. 이것이 오늘날 경쟁의 심화로 인해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는 사회계층과 이념대립의 형식으로 심화되고 있는 계층 간의 이익충돌 현상에 대해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방법이다. 더 나아가 이념적 대립으로 보이는 남북갈등을 정치체제의 흡수통일이 아니라 삶의 모습들의 수렴을 통한 삶의 영역, 생활세계에서의 통일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 통일과 통합에 대한 개념적 논의를 통해 동일성의 회복이나 형성이 아니라 상호공존에 대한 이론을 살펴보고, 남북관계와 국제관계의 변화에 따른 통일정책의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오늘날 현실을 반영하는 남북통일의 방법에 대해 고민해보고자 한다.

II. 이론적 고찰

1. 다문화사회의 개념적 고찰

다문화사회를 문화들의 단순한 공존으로 바라보며, 이를 위해 다른 문화에 대한 관용을 요구하는 시각에서는 다문화사회를 다수의 문화가 함께 존재하는

사회로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다수(多數)란 수적 의미에서 단수(單數)에 대립하는 복수(複數)가 아니라 다수성이라는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다수성이란 현실에서 다수의 무엇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아니라 다수를 인식할 수 있는 인식영역의 확장을 의미한다.

단(일)문화사회와 다문화사회의 구별은 문화의 공존형식의 차이, 문화를 인식할 수 있는 영역의 차이에 기초한다. 그러므로 다문화를 여러 유형의 이질적인 주변문화를 제도권 안으로 수용하여 형성된 문화라고 규정한 스토리(Storey, John.)³⁾의 논의는 주변문화에 대한 제도권 내의 수용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다문화사회에 대해 박이문⁴⁾은 사회 내에 존재하는 하위사회의 신념을 똑같이 인정하고 존중하는 사회라고 규정하고, 송재룡⁵⁾은 다양한 인종·문화·이념·종교·민족·젠더 등과 같은 문화적 단위들의 공존에 대한 인식론적 및 규범적 입장이나 태도를 향유하는 사회라고 지적한다. 추병완⁶⁾은 국적·언어·문화적 배경·성·계층적 귀속감 등에 관계없이 모든 인간이 인간으로서 보편적 권리를 향유하고 각각의 특수한 삶의 방식을 존중하며 공존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집합적 노력이 존재하는 사회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문화사회의 등장요인에 대해 김남국⁷⁾은 외부 문화의 유입이라는 측면에서 최초로 외부문화로 구성된 국가와 단일한 문화로 시작되었으나 외부문화가 유입된 국가로 구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용재⁸⁾는 다문화사회를 등장요인을 내적요인과 외적요인으로 구분하고 이질적 문화의 수용뿐만 아니라 내적 문화의 분화를 통해서도 다문화사회가 등장할 수 있음을 지적한다.

단(일)문화사회는 제도권 내에 의식가능하고 인정가능한 단 하나의 주류문화

3) Storey, John, *Cultural studies and the study of popular cultures: theories and methods*. Edinburgh: Edinburgh University Press, 1996.
 4) 박이문, "문화다원주의 타당성과 한계." 『철학과 현실』 제52호, 2002.
 5) 송재룡, "다문화주의와 인정의 정치학, 그리고 그 넘어: 찰스 테일러를 중심으로." 『사회이론』 제35호, 2009.
 6) 추병완, "다문화사회에서 학교통일교육의 새 활로." 『교육과정평가연구』 제14권 제1호, 2011.
 7) 김남국, "다문화시대의 시민: 한국사회에 대한 시론." 『국제정치논총』 제45집 제4호, 2005.
 8) 이용재, "다문화사회개념에 대한 고찰." 『다문화와인간』 제1권 제1호, 2012.

만이 존재하는 사회라고 할 수 있다. 헤르더(J. G. Herder)의 문화개념은 근대 단일민족국가개념에 매우 근접한다. 단일문화는 동질화, 인종적 기반, 그리고 문화적 경계로 구성된다. 이는 문화가 특정한 인종민족으로 구성된 공동체에 기초하며, 그 인종민족 공동체 구성원들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다른 인종민족 공동체와 구별되고 경계를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전통개념에서 문화는 삶의 형태 전체에 대한 개념인 동시에 역사적 동질성을 유지하고, 다른 문화공동체로부터 독립적 형태를 가진다.⁹⁾ 이처럼 민족문화에 기초한 단일문화는 단일민족국가, 단일민족에 기초한 단일문화를 가진 국가, 단(일)문화사회로 이어진다. 단(일)문화사회에 대해 김광익¹⁰⁾은 국가가 그 사회의 이질적 문화, 즉 다수의 구성원과 다른 문화를 가진 개인들을 반사회적 또는 반민족적이라는 명목으로 분리해낸 결과라고 지적한다. 국가가 강요를 통해 단일문화체계를 라는 집단적 문화를 만들어나갈 때 단일문화체계를 강요하는 과정에서 결합하게 되는 ‘근대성’과 ‘합리성’의 관념은 단일문화라는 ‘신화’의 이데올로기와 유사한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단일민족국가에서 주장하고 있는 문화적 정체성의 동질성인 인위적이고 강제적인 힘의 결과일 수 있다.¹¹⁾

오늘날 사회구성원들이 가지는 다양한 혹은 이질적인 삶의 방식을 하나의 양식이나 관습으로 규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제 문화는 음악과 예술 같은 예술창작영역에 제한되지 않고 제도나 일상적 행동에서 의미와 가치를 표현하는 특정한 삶의 방식으로 확장되었다. 이러한 시각에서 문화는 단일하고 보편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특수하고 개별적인 삶의 방식들의 복합체로 본다. ‘문화’는 ‘문화들’로 존재한다.¹²⁾ 따라서 문화는 보편적이고 개념적인 현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구체적 현상들을 관통하는 개념적 규정일 수 있다. 문화를 “인간들이 그들 삶의 과정 속에서 부딪히는 실존적인 문제들에 대한 어떤 일관된 해결을

모색해 보려는 정신적 노력”¹³⁾이라는 설명이 이러한 견해를 지지한다.

전통적 문화개념에 기초한 단(일)문화사회는 현대문화가 표출하는 내적인 복잡성에 대응할 수 없고, 그러한 복잡성을 설명할 수도 없다. 따라서 현대사회는 다문화사회로 지칭하는 것에는 현대사회의 문화적 다양성을 통해 표출되고 있는 갈등의 다양성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보편적 존엄성에 대한 존중이 오히려 힘 있는 다수의 헤게모니 문화를 힘없는 소수에게 강요하는 보편성을 가장한 특수주의를 조장할 수 있음에 대한 반성에도 기초한다. 따라서 이제 강한 계급적 연대를 통하여 단일한 문화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통합의 시기가 지나고, 느슨한 사회적 연대를 통한 다양한 문화의식의 표출이 가진 수직적·수평적 다양성은 바로 갈등 주체의 다양성과 사회 갈등의 요소로서의 이익 균열이 문화라는 삶의 형식에 따라 분열되고 있음을 알려준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사회통합의 방식의 방식이 차이의 동질화에 기초한 통일의 방식이 아니라 차이의 다양성에 대한 포용의 방식이어야 한다는 지적이며, 오늘날 항시적인 사회균열구조의 반영이라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기도 하다.¹⁴⁾ 이러한 다문화사회 구성원들에게 요구되는 다문화시민성은 자신의 민족적·문화적 공동체와 국민문화 양자에 대한 헌신을 유지하려는 시민의 권리와 욕구를 인정하고 정당화하는 개념이다.¹⁵⁾

민족적문화적 공동체와 함께 정치적 공동체로서 국가에 기초하는 국민문화의 충돌하는 양자를 함께 유지하는 다문화사회의 문화형식은 특정한 지향을 가진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 속에 존재하는 상이한 생활양식의 문화를 그대로 포용함으로써 수직적수평적 차이에서 발생하는 다양성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즉 문화적 계급성에 기초한 인정의 형식에 따른 사회적 가치의 재분배의 편향된 편견을 극복하고, 문화적 다양성에 기초한 현상으로서 문화적 형식과

9) 최성환, “다문화주의의 개념과 전망: 문화형식(이해)의 변동을 중심으로” 『철학탐구』 제24호, 2008, p. 292.

10) 김광익, “다문화주의의 시각.” 『현대사회와 인권』, 서울: 나남출판사, 1998.

11) 이용재, “다문화사회개념에 대한 고찰.” 『다문화와인간』 제1권 제1호, 2012, p. 40.

12) 고길섭, 『소수문화들의 정치학』, 서울: 문화과학사, 2000, p. 33.

13) Bell, Daniel, *The Cultural Contradictions of Capitalism*. New York: Basic Books, Inc., Publishers, 1978, pp. 12~13.

14) 이용재, “다문화사회개념에 대한 고찰.” 『다문화와인간』 제1권 제1호, 2012, p. 42.

15) 김용신, 『다문화교육론 서설』, 파주: 이담, 2009, p. 26.

생활방식에서 발생하는 차이에 대한 편견을 극복함으로써 동일한 문화적 분모를 기반으로 나누어지는 사회적 분류를 극복함으로써 다양한 형식의 재현을 통해 질주하는 문화적 분기를 다양성으로 인정할 수 있는 사회를 다문화사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통일과 통합의 개념적 고찰

한국에서 통일에 대한 개념적 논의는 이론적 논의에 앞서 시대적 상황에 따라 특수한 역사성을 반영하면서 남북통일에 대한 요구에 대한 응답으로 진행되었다. 따라서 통일논의는 해방 직후에는 외세로부터의 해방을 뜻하는 자주권 운동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고, 1970년대에는 남북한 체제경쟁에서의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1980년대 중반 이후 통일은 남북한 상호 이익을 도모하고 생활양식과 의식의 동질화를 통한 민족통합의 의미를 갖게 되었다. 이렇듯 통일 개념의 변화에 맞추어 통일교육의 명칭과 내용도 함께 변화하였다.¹⁶⁾ 2000년 이후에 남북화해의 분위기를 통해 북한에 대한 객관적 이해가 요구되고, 남북화해 협력을 통한 민족공동체 형성을 위한 논의와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추구하는 평화적 문화형성을 강조하는 새로운 통일담론이 형성되었고, 이에 맞추어 통일 교육 또한 새롭게 개편되었다. 통일교육이 국내외의 정치·경제적 조건에 의해 좌우되는 사회정치적 현실의 영향력 아래에 놓여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하나의 민족’이라는 집합의식, 민족정체성에 대한 공감의식을 전제로 한다는 것은 두말의 여지가 없다.¹⁷⁾

오늘날 우리의 현실을 반영하는 통일논의는 남북한 분단 이전의 상황으로 되돌아갈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남북한의 합의에 기초한 새로운 민족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지향하는 민족공동체는 단순히 혈연에

기초한 폐쇄적인 민족주의가 아닌 다른 민족과 그들의 문화도 존중하는 열린 민족주의에 기초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민족공동체를 배타적으로 하나의 껍줄에 근거한 것이라고는 보지는 않지만, 통일의 당위성을 민족공동체 의식에서 찾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¹⁸⁾ 특정한 국가의 국민이라는 의식은 특정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논의를 위해 필요한 개념이 바로 정체성이다. 브루베이커(Brubaker, Rogers.)¹⁹⁾가 국민정체성이란 일반적으로 특정한 국가의 구성원들이 스스로 국민(Nationhood)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방식이자 스스로를 규정하는 자기인식이라고 규정했듯이, 민족정체성이란 특정한 민족의 구성원들이 민족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방식이자 스스로를 규정하는 자기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 통일에 대한 논의 또한 이러한 정체성에 대한 담론적 구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은 사회통합의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사회통합은 정치·경제 제도의 통합을 의미하는 체제통합과 동일한 가치를 공유함으로써 공동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가치통합으로 구분할 수 있다. 통일과 통합을 구분하는 견해로 통일은 정치적 통합과 관련된 영토통합으로, 통합은 문화적 통합과 관련된 기능적 체제로 보는 견해와 통일을 정치경제적 통합으로 완결되는 체제통합으로 구조적 차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통합을 구성원 간의 상호교류과정에서의 편견과 차별이 제거되고 신뢰를 기반으로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²⁰⁾ 또한 에치오니(A. Etzioni)의 정의를 인용하여 통일은 통합을 이루는 행위와 과정으로 설명하고, 정치통합을 조건이 성취된 상태로 보는 견해도 있다.²¹⁾ 그리고 사회통합에 대해 분리 상태에 있던 두 개

16) 추병완 외, 『윤리학과 도덕교육』, 고양: 인간사랑, 2000, p. 483.

17) 박명규, “남북관계와 비대칭적 분단국체제론.” 『통일과 평화』 창간호, 2009. p. 15 참조.

18) 김경은·윤노아, “청소년의 국민정체성, 통일, 다문화수용성에 대한 인식-다문화시대 사회과 통일교육에 의 함의.” 『사회과교육』 제51권 제1호, 2012, p. 125.

19) Brubaker, Rogers, *Citizenship and Nationhood in France and Germany*.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92.

20) 이 논의에 대해서는 차재호의 “남북한 문화통합의 심리학적 고찰”(『북한문화연구』 제1권, 1993)과 고성호의 “통일한국의 사회체제와 사회통합에 관한 연구”(『한반도 통일론: 전망과 과제』, 서울: 건국대학교 출판부, 1997) 참조.

21) 조찬래 외, 『남북한통합론』 서울: 대왕사, 1998.

이상의 개체가 하나의 개체로 합쳐 구조적 변화를 가져오는 정치통합, 곧 통일 이후 뒤따를 인적교류와 접촉에 의해 발생하는 갈등을 건설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사회구성원이 공통의 규범과 가치를 내면화하고 공통의 생활양식을 습득하여 상호의존관계를 강화시켜나가는 과정²²⁾이라고도 한다. 이처럼 사회통합은 개인적 차원의 사회적응이나 사회적 관계에서부터 사회구조적 차원의 체제통합까지 매우 다양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개인적 차원의 사회통합과 구조적 차원의 사회통합으로 나누어 이민, 귀화처럼 개인이 새로운 사회에 편입되는 통합 과정과 사회체계를 구성하는 다수의 하위체제가 공동의 질서에 통합되는 과정으로 나누기도 한다.²³⁾ 이외에 사회통합을 사회적 통합(social integration),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 사회적 응집(social cohesion)의 용어로 구분하고, 사회적 응집의 개념으로 규정하면서 사회통합을 한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소속감을 갖고 공동체 내에서의 삶에 적응하고 공동체 내의 삶에 대한 만족감을 느끼는 상태라고 규정하기도 한다.²⁴⁾

통일을 협의의 절대적 통일관으로 바라보면, 하나의 기본이념과 하나의 제도로 구성되는 정치체제가 집단 구성원 모두를 규제하는 정치통합의 상태와 동일시한다. 즉 하나의 헌법체계를 가지게 되는 상태를 정치통합으로 보고 통일이 달성된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광의의 상대적 통일관으로 바라보면 통일은 민족사회 구성원 개개인의 삶의 영역이 전 영토로, 전 사회로 확대되어 생활공간의 통합, 경제체계의 통합, 문화통합, 의식통합, 정치 통합이 모두 이루어진 상태를 통일로 보며, 이를 연속변량적 개념으로 이해한다. 광의의 상대적 통일관에서는 통일을 양분적으로 보지 않고, 정도의 차이로 이해하며, 정치통합은 통일의 한 국면으로 이해한다.²⁵⁾ 광의의 상대적 통일관은 사회통합의 개념과

유사하다. 이처럼 사회통합은 개인적 수준이나 구조적 측면, 가치적 측면이나 체계적 측면에서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으며, 궁극적 수준의 통합은 가치의 통합을 통한 개인적·구조적 측면의 통합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체제통합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만 가치통합은 상대적으로 느리게 진행된다. 가치적 측면에서 궁극적 사회통합에 대한 논의는 정체성 확립, 상대적 박탈감의 해소와 동질성 회복, 상호 이해와 교류를 통한 사회문화적이며 심리적인 적응이 이루어져야 한다.

사회통합이 비통합적인 상태에 있는 사회 내 집단이나 개인이 서로 적응함으로써 단일의 집합체로 통합되어 가는 과정을 의미한다면, 사회통합의 과정은 경제적·문화적·정치적 양극화의 극복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프랑스에서 국가에 의한 사회보장으로부터 배제된 청년실업자, 편부모 가구주, 장애인 등의 상태를 가리키기 위해 처음 사용된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의 극복으로서 사회통합은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차원에서의 다중적 박탈과 차별을 겪는 과정의 극복을 의미한다. 이들에 대한 배제는 사회통합의 다양한 수준만큼 다층적으로 발생한다. 따라서 통일을 위한 논의에서 진행되어야 할 사회통합은 이러한 다층적 배제의 가능성을 극복하고 생활세계에서의 가치공유를 통한 새로운 정체성과 시민성을 생성하기 위하여 제도적·법률적 통합이 아니라 공유할 수 있는 새로운 가치생성에 기초한 사회통합을 통해서 가능할 것이다.

III. 한국의 통일정책의 전개

남북관계는 주로 국제상황, 북한과 남한의 대내적 상황에 따른 통일정책에 영향을 받는다. 그동안 한국의 통일정책은 대북정책, 대북포용정책, 평화변영

22) 홍기준, "통일 후 남북한 사회통합: 새로운 이룬구성을 위한 시론" 『국제정치논총』 제39권 제3호, 1999, p. 371.
 23) 고상두, "통일 이후 사회통합 수준에 대한 동서독 지역주민의 인식" 『유럽연구』 제28권 제2호, 2010, p. 272.
 24) 오형훈 외, 『취약계층 평생직업 훈련의 사회통합효과분석』,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0.
 25) 홍기준, "통일 후 남북한 사회통합: 새로운 이룬구성을 위한 시론" 『국제정치논총』 제39권 제3호, 1999,

정책, 상생공영의 대북정책 등 다양하게 표현되어 왔다. 그리고 통일정책의 일환으로서 통일교육 또한 이러한 정치적시대적 상황에 따라 변화되었다. 1945년 분단 이후 지금까지 통일교육은 크게 세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짐으로써 냉전시대가 종식되었던 1989년까지 이념적 대립에 기초한 반공교육이 중심을 이루었고, 1990년대 초반까지는 통일안보에 대한 내용이 교육의 중심을 이루었다. 그러나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통일교육은 다양한 통일에 대한 시각을 반영하기 시작하였다. 이처럼 통일 환경의 변화 속에서 1989년 노태우 정부는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제안했고, 이 제안은 1993년 2월 25일 출범한 김영삼 정부 시기 ‘민족공동체통일방안’으로 자리 잡았다.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물론 이명박 정부에서도 남북의 교류와 접촉을 통해 민족공동체 의식을 고양시킬 것을 강조했다. 따라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오늘날 우리 통일정책의 근간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자주평화민주’를 통일원칙으로 하고 화해협력→남북연합→통일국가로 이행하는 3단계 점진적 이행론에 근거한 통일론으로, 지난 20여 년 동안 가장 공감할 수 있고 실현가능한 로드맵으로 받아들여져 왔다.²⁶⁾

오늘날 통일 환경은 근본적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미국을 주도로 한 국제관계는 2008년에 금융위기의 여파로 미국의 위상이 조금씩 낮아지고 있는 반면, 중국은 2011년에 GDP대비 세계 2위, 세계 1위의 채권국가, 외환보유고 세계 1위라는 막강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에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냉전시 기에는 미국이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 중국을 이용했으나, 이제 미국은 세계 최고의 힘을 가진 중국과 만나 패권을 다투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²⁷⁾ 1991년 남북한 유엔(UN) 동시 가입은 유엔이 독립 국가만이 참가할 수 있는 국가간기구라는 점에서 개별국가로서의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았다는 점과 함께

26) 김병로, “통일환경과 통일담론의 지형변화—정부통일방안을 중심으로.” 『통일문제연구』 제26권 제1호, 2014, p. 3.

27) 성장환, “역대정부의 통일정책 검토와 이명박 정부의 통일정책 변화방향.” 『국제정치연구』 제14집 제2호, 2011, p. 250.

남북한 상호간 국가적 지위를 강조함으로써 유엔동시가입이 영구분단을 초래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그러나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에서도 나타나듯이, 남북한은 독립 국가이면서 동시에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 관계에 놓여있다. 그리고 이러한 특수 관계는 민족공동체 초기 상황에서 점진적이고 기능적인 교류협력을 통한 통합을 기대하면서, 비정치적 분야의 교류협력을 활성화시켜 나감으로써 분단 상황을 평화적으로 관리하면 자연스럽게 정치적 통합에 이르게 된다는 기대에 기반하고 있었다. 그러나 북핵문제가 대두되면서 이러한 기능주의적 과급효과에 대한 회의론이 확산되고, 정치협상과 같은 지도자의 결단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동안의 경험은 교류협력의 증대 그 자체가 자연스럽게 통일방안의 단계적 이행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사회경제적 교류의 진전이 정치군사적인 화해협력으로 이행하는 것이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자연스러운 이행 또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더구나 오늘날 남북한의 비대칭성이 확대되면서 한국의 주도적 역할에 대한 기대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통일정책의 중요성은 심화되고 있다. 지난 20여 년간의 남북관계는 한마디로 말해 관계의 진전과 비대칭성의 심화로 요약할 수 있다. 적어도 1980년대 말까지 남북한은 기본적으로 서로 적대적이고 관계는 거의 없는 가운데 대등한 양자대립의 틀로 이해될 수 있었다. 하지만 탈냉전과 뒤이은 남북한의 정치경제적 전환은 남북한의 힘과 자원의 현저한 비대칭성을 심화시켰다.²⁸⁾ 따라서 통일과정에서 남북한의 대등한 양자성과 함께 경제적 비대칭성과 문화적 다양성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도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한국의 통일정책은 그동안 선거 특히 대통령 선거에서 중요한 선거공약이었다. 따라서 정부가 교체될 때마다 통일정책은 변화되었다. 특히 통일정책의 지향점은 정부의 정통성에 대한 시금식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에 통일을 위한 실질적 노력보다는 대내외적으로 정부의 역량을 과시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었다. 따라서

28) 박명규, “남북관계와 비대칭적 분단국체제론.” 『통일과 평화』 창간호, 2009.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1998년 김영삼 정부까지의 통일정책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남북한 체제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형식적으로 한반도 통일을 주장하였지만, 실제로는 북한에 대한 이해와 전략이 부족하였고, 남북대화의 방향성 또한 명확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시기에 통일정책은 주로 국내적 통합과 남북관계의 적절한 관리에 치중하였다.

1989년 이데올로기의 장벽이 허물어진 탈냉전시대에 김영삼 정부는 남북한이 이념을 초월하여 같은 민족이라는 동포애를 바탕으로 통일을 이루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민족공동체'를 통일 주체로 보고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제시하였다. 1993년 2월 25일 제14대 대통령 취임사에서 "어느 동맹국도 민족보다 더 나올 수는 없다. 어떤 이념이나 어떤 사상도 민족보다 더 큰 행복을 가져다주지 못한다."면서 통일의 주체가 민족임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남북교류협력법」을 제정하는 등 법제도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제1차 북핵문제로 남북관계가 악화되면서 실질적 정책을 추진하지 못한 채 추상적 논의에 그치고 말았다.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통일은 먼 장래의 일이고 통일을 위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화해와 교류, 협력이라는 취지하에 소통과 교류협력, 공존을 강조하였다. 이는 3단계로 설정된 통일과정에서 1단계의 화해 협력에 대한 노력에 집중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특히 거시적인 통일논의보다는 구체적인 교류협력과 외교안보 정책을 추진하였다.

특히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화해협력을 통해 공존의 조건을 서로 확인하였다. 공존의 조건이란 서로 적대적 행위를 통한 흡수통일을 시도하지 않는다는 확신과 신뢰를 통해 협력가능성을 확대하는 것이다. 1998년 김대중 정부는 통일의 조건으로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대북화해 협력정책'을 추진하였다. 이 정책은 김영삼 정부와 달리 북한 정세의 안정이 한반도 안정에 필수 조건이라는 인식하에 북한의 안정을 위해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북한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북한에 대해 느슨한 상호주의를 적용했다. 따라서 김대중 정부는 형식적 통일논의에 머물지 않고 남북대화를 통해 실질적인 교류와 협력을 추진해

나가고자 했다.²⁹⁾ 2003년 출범한 노무현 정부는 1991년의 남북기본합의서와 2000년의 6·15남북공동선언을 기본으로 남북교류와 협력을 통해 평화적 공존을 이룩해 나가고자 했다. 따라서 북한과의 공동번영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노력하며, 더 나아가 동북아의 중심국가가 되겠다는 통일정책을 제시했다. 이러한 통일정책은 한반도에 한정되어 있던 기존의 통일정책과 달리 동북아시아로 시야를 확대하고, 군사안보 분야의 진전 또한 중시한다는 점에서 포괄적 국가발전전략의 일환으로 해석할 수 있다.³⁰⁾ 그러나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화해협력을 통한 공존의 통일담론은 2006년 북한의 제1차 핵실험을 통해 결정적인 타격을 받았다. 북한의 체제안정을 통한 한반도 체제의 안전과 이를 통한 교류협력에 기초한 국가발전전략이 결국 북한의 핵실험을 지원함으로써 한반도 체제의 불안정으로 이어졌다는 국민적 실망감이 확산되었다. 북한에 대한 비판과 부정적 정서가 형성되면서 햇볕정책에 대한 회의론이 확산되고, 북한에 대해 강경한 고립정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2008년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북한에 대한 교류협력정책이 북핵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일방적 대북지원정책 또한 우리 현실에 맞지 않는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남북한의 경제적 비대칭성을 바탕으로 북한경제의 대남의존도가 증가하고, 북한주민의 대남의식이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정부가 적극적인 북한의 변화를 견인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북한에 대한 지원은 상응한 대가를 보장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인식 하에 엄격한 상호주의원칙을 확립하였다. 그동안 북한에 대한 일방적 지원이 핵무기 개발의 기회로 이용되고, 한미협력을 약화시켜 안보문제를 가져왔다는 판단 하에 새로운 통일정책을 제안하였다. 남북관계에 장애물이 된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대화와 교류 또한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판단 하에 통일의 전제조건은 주한미군철수나 보안법 철폐와 같은 남한의 문제가 아니라 북한의 개혁과 개방, 체제변혁과 민주화가

29) 성장환, "역대정부의 통일정책 검토와 이명박 정부의 통일정책 변화방향" 『국제정치연구』 제14집 제2호, 2011, p. 254.

30) 위의 논문, p. 255.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하였다. 통일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북한의 변화를 추구하고, 남북한의 제도적 동질화를 위해 북한체제를 민주화, 시장화, 개방화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이명박 정부 후기에 추진한 ‘3대 공동체 통일구상’은 교류협력을 기반으로 한 민족공동체, 경제공동체를 형성하기 이전에 평화공동체를 부분적으로 가동해야 한다고 설정한 점에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변화를 시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³¹⁾ 통일의 방식에서도 북한의 붕괴를 통한 흡수통일을 추진하지는 않았지만, 공존 또한 추구하지 않는 명확하지 않은 입장을 보였다. 이명박 정부는 북한이 태도변화를 보이고 실질적 조치를 취하면 교류와 지원을 실시한다는, 북한의 개혁개방 변화에 상응하는 교류협력정책을 제시하였다.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의 통일담론을 기본적으로 이어받으면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교류협력을 균형있게 추진한다는 한반도신뢰프로세스를 제안하고 있다. 구체적 정책에서 대화와 교류협력을 통한 남북관계의 개선을 통한 핵문제 해결과 북한변화를 이끌어 내고자 한다는 점에서 기능주의 햇볕정책의 담론을 강조하고 있지만, 핵문제를 포함한 북한의 선제적 변화를 원칙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는 출범 이후 가장 중요한 국정목표의 하나로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구축’을 제시했다. 이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한 남북관계의 정상화로써 통일기반조성을 꾀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평가된다. 대통령 후보시절 제시한 ‘평화정착-경제통일-정치통일’의 3단계 로드맵도 큰 틀에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통일기반조성과정은 단기적으로는 군사적 억지와 안보강화를 피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남북관계의 안정을 통한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실현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³²⁾

시기별 통일정책을 살펴보면, 북한의 체제부정을 통한 북진통일론을 시작으로

로 경제성장을 통한 이념대립의 시기, 평화통일을 위한 외교정책의 시기, 1981년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 이후 민족공동체를 중심으로 하는 통일방안의 시기를 거쳐 1997년 국민의 정부 이후에 적극적인 화해통일정책이 시행되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하였듯이 북한이 핵실험으로 경직된 남북관계로 인해 2008년 이후 북한의 체제변화를 전제로 하는 한국정부의 지원이라는 상생공영의 정책이 시행되었고, 2013년 박근혜정부에서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기초한 통일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통일정책의 변화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부의 지원정책에도 영향을 미쳤다. 1990년대 초반까지 체제경쟁이라는 정치적 맥락에서 안보차원의 틀 속에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정책이 입안되었기 때문에, 북한정권과의 체제경쟁에서 우위로 선전될 수 있는 탈북 그 자체에 대한 정치적 의미 부여가 컸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이들을 성공적으로 남한사회에 정착시키기 위해 과격적인 지원을 했다. 그러나 구조권이 붕괴되면서 체제경쟁의 의미가 사라지고, 탈북규모가 증가하고 북한이탈목적이 변화함에 따라 스스로의 노력을 독려하고 일을 통한 남한사회 정착을 권장하는 자활로 그 중심축이 이동한 것이다. 이러한 변화에는 북한이탈주민의 입국형태, 입국동기, 규모, 성비율의 변화가 영향을 미쳤다.

< 표 1 > 역대정부의 탈북자에 대한 문제정의와 지원정책

구분	사회적 피해	문제의 원인	탈북자에 대한 시각	책임주체	정책목표
박정희	군사적 긴장	공산주의와 대립	월남귀순자	정부책임 무조건적 지원	체제선전
박정희 후기 김영삼 초기	군사적 긴장 고조	공산주의와 대립 (체제경쟁)	귀순용사 (정치적 난민)	정부책임 무조건적 지원	체제선전
김영삼 중기	재정부담 지원의 형평성	체제경쟁의 퇴색	생활보호대상자 (경제적 난민)	정부책임 무조건적 지원	기초생활 보장
김영삼 후기 김대중노무현 초기	재정부담 저소득층 형성	입국자수 증가 근로기회/능력 부족	경제적 난민	정부와 개인의 분담 조건적 지원	자립자활
노무현 이명박	사회적 배제	청소년/2세대 증가 다양성문제	이주민 사회적 소수자	정부와 개인의 분담 조건적 지원	자립자활 사회문화적 통합

출처 : 정광호 외, “탈북자지원정책의 새로운 이해-문제정의의 관점에서.” 『한국정책학회보』 제19권 제1호, 2010, p. 82 <표 2>

31) 박종철김병로 외,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새로운 접근과 추진방안: 3대 공동체 통일구상 중심』, 서울: 통일연구원, 2010.

32) 김성한문경연, “한반도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비정부기구(NGO)의 역할: 대북지원 NGO와 북한 인권 NGO를 중심으로.” 『국제관계연구』 제19권 제1호, 2014, p. 167.

이러한 이유로 탈북자지원문제에 대해서 한국정부는 이들을 월남귀순자, 귀순용사, 생활보호대상자, 경제적 난민, 이민자·사회적 소수자로 그 사회적 지위를 다르게 인식하였고, 따라서 이들에 대한 지원정책 또한 변화하였다. 그러나 오늘날 자활을 중심으로 하는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은 그다지 성공적이지는 않다. 정책 변화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자활을 위한 사회적 기반으로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이들의 사회적응 또한 그다지 성공적이지는 않다. 북한이탈주민의 고용형태는 상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 등 임시직이 대부분이며, 단순노무직의 비율이 가장 높고, 근무기간 또한 거의 과반수가 반년도 채 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의 월평균근로소득은 150만 원 이하가 약 70%에 이르고 있어 새로운 사회취약계층을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실질적 정치·경제·사회적 통일 환경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념적으로 추진되는 통일정책이 가지는 한계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할 것이다.

IV. 통일 인식과 통일 정책의 변화

1. 통일인식에 대한 변화

1945년 해방을 맞이하고 1948년 남북한에서 각각 단독정부를 수립하면서 맞이한 분단은 1950년 6·25 전쟁을 통해 이념적 대립을 넘어 정치·경제·사회적 모든 분야의 대립으로 확산·심화되었다. 민족상잔의 기억은 체제대결을 통해 모든 일상생활 속에 각인되었다. 통일은 대립과 극복을 통해 상대 체제를 해소(解消)하는 방식으로 이해되었다. 반공(反共)을 넘어 멸공(滅共)이라는 구호는 통일 방식에 대한 시대적 상황을 적절히 보여준다. 그러나 오늘날 신자유주의의 확산과 세계화의 효과는 한국 시민사회에서의 이

러한 통일의식을 약화시키고 있다. 무엇보다 국민국가에서 행사하던 절대적 주권과 국경통제는 급속한 정보화와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변화하고 있다. 경제 분야에서는 동아시아 역내의 상호작용과 교류가 국가 규제를 넘어 자체의 동력을 획득하고 있고, 기후나 범죄, 에너지 등에 대한 국제협력은 이미 개별적 국가 차원을 넘어서고 있다. 오늘날 초국가적, 다차원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널리 확산되고 있고, 비정치 분야에서는 정부 이외의 연구기관, 대학, 민간단체, NGO, 국제기구 등의 역할이 매우 커지고 있어서 다원적 조직체계를 바탕으로 한 상호적 네트워크로서의 거버넌스(Governance)로 재구성되어야 한다고 주장되고 있다.³³⁾

최현³⁴⁾의 2007년도 성균관대 서베이리서치센터에서 실시한 국민의식조사 연구에서 한국인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인이라는 인식과 한국국적이라는 유사한 결과가 제시되었다. 이처럼 오랫동안 단일민족 국가의 전통을 유지해 온 한국사회에서 한국인의 국민정체성 인식이 종족적 모델과 시민적 모델 중 어느 쪽에 가까운가를 분석하는 최근의 실증 연구들은 한국인이 혈통주의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다른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미래 통일의 주역인 청소년의 통일인식 또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중현³⁵⁾에 따르면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의 조사결과 반드시 통일이 되어야 한다는 응답은 23.1%, 통일이 되면 좋겠다는 응답은 51.6%로 전체의 74.7%가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지만, 통일에 대한 적극성은 떨어지고 있다. 특히 통일문제에 관심이 없다는 응답이 10.5%로 2004년 9.4%, 2007년 9.2%에 비해 미미하기는 하지만 무관심한 대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33) 김병로, "통일환경과 통일담론의 지형변화-정부통일방안을 중심으로." 『통일문제연구』 제26권 제1호, 2014, p. 8.

34) 최현, "한국인의 다문화 시티즌십(multicultural citizenship): 다문화 의식을 중심으로." 『시민사회와 NGO』 제5권 제3호, 2007.

35) 변중현, "20대 통일인식과 대학 통일교육의 과제." 『통일정책연구』 제21권 제1호, 2012.

< 표 2 > 청소년의 통일에 대한 인식

항목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평균 (표준편차)
통일은 한국의 단일민족성을 회복하는 것을 의미한다.	12.1%	19.7%	34.2%	24.6%	9.4%	3.00 (1.141)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14.3%	31.4%	17.3%	31.9%	5.1%	3.18 (1.174)
이후에 소득이 생기면 통일을 위해 특별세금을 낼 것이다.	4.3%	13.8%	28.9%	30.0%	23.0%	2.46 (1.115)
통일이 된다면 남한이 대표집단이 되어야 한다.	31.5%	31.1%	20.4%	13.1%	3.9%	3.73 (1.150)

주 : 리커트 5점 척도를 사용함(매우 그렇다 5점 - 매우 그렇지 않다 1점)
출처 : 김경은·윤노아, “청소년의 국민정체성통일다문화수용성에 대한 인식,” 『사회과교육』 제51권 제1호, 2012, p. 132 <표4> 일부수정

김경은·윤노아³⁶⁾에 따르면 통일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는 응답은 14.3%, 통일을 위해 경제적 부담을 하겠다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는 응답은 4.3%에 불과한 것을 나타냈다. 특히 경제적 부담에 대한 응답에서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53.0%로 나타나 통일을 위한 경제적 부담에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통일의 의미에 대해서 단일민족성을 회복하는 것이라는 응답은 그렇다는 응답이 31.8%,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34%로 통일의 의미를 단일민족성의 회복에만 두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통일이 된다면 남한이 대표집단이 되어야 한다는 응답은 62.6%로 한국정부 주도의 통일방안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³⁷⁾

36) 김경은·윤노아, “청소년의 국민정체성, 통일, 다문화수용성에 대한 인식-다문화시대 사회과 통일교육에 의 함의,” 『사회과교육』 제51권 제1호, 2012.
37) 2008년 12월 사단법인 아시아인권센터에서 실시한 『외국인 이주노동자와 다문화사회에 관한 한국인 의식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단일민족 국가라는 사실은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문항에 대해서는 찬성이 44.1%, 반대가 16.3%로 나타나 찬성하는 응답자가 반대하는 응답자보다 훨씬 많았음을 알 수 있다.

< 표 3 > 청소년의 문화적 수용성에 대한 인식

항목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평균 (표준편차)
다양한 인종, 종교, 문화가 공존하는 것이 좋다.	21.6%	34.3%	30.6%	11.0%	2.3%	3.62 (1.013)
인종, 종교, 문화적 다양성이 확대되면 도움이 된다.	18.1%	39.1%	30.5%	10.5%	1.7%	3.61 (.954)
한국이 단일민족 혈통을 유지해 온 것은 자랑스러운 일이다.	16.5%	26.3%	39.0%	15.0%	3.0%	3.38 (1.024)
단일민족국가라는 사실이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8.0%	16.4%	40.5%	26.8%	8.2%	2.89 (1.033)

주 : 리커트 5점 척도를 사용함(매우 그렇다 5점 - 매우 그렇지 않다 1점)
출처 : 김경은·윤노아, “청소년의 국민정체성통일다문화수용성에 대한 인식,” 『사회과교육』 제51권 제1호, 2012, p. 132 <표4> 일부수정

통일의 의미로 단일민족성의 회복이라는 응답이 31.8%로 예상보다 낮게 나타났다. 청소년의 문화적 수용성을 살펴보면, 다양한 인종, 종교, 문화의 공존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이 55.9%로 나타났고, 이러한 다양성의 확대가 도움이라는 응답은 57.2%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이에 반해 단일민족 혈통을 유지해 온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응답은 42.8%로 그렇지 않다는 18.0%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나 보통이라는 응답이 39%로 나타났고, 단일민족이 국가경쟁력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24.4%로 그렇지 않다는 35%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통일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이 통일에 대해 긍정적이지만, 그 의미가 민족동질성의 회복에만 두고 있지는 않으며, 통일에 대한 태도와 관련해서도 경제적 부담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한국이 대표집단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통해 통일에 대해 다소 패권적 입장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소에서 실시한 『2013년 통일의식조사』에 따르면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54.8%, 필요없다는 응답이 23.7%로 나타났다. 1994

년과 2005년 조사결과에 따르면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각각 91%와 83.9%로 나타나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응답이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로 전쟁위협을 없애기 위해서는 응답과 한국이 보다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실용주의적 경제정책의 영향은 2011년 이후 낮아지는 모습을 보여 남북통일의 중요한 동기는 경제적 발전보다는 남북한 갈등 및 군사적 대립구도의 극복이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³⁸⁾ 이외에 박명규·김병로 외(2013)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통일을 해야 한다는 응답은 40.3%, 전쟁위협을 방지하기 위하여 통일을 해야 한다는 응답은 30.8%, 선진국이 되기 위하여 통일을 해야 한다는 응답은 14.3%로 나타나 전통적으로 통일의 이유로 내세웠던 민족성 회복의 의미는 약화되고, 통일의 의미를 군사안보적 목적과 경제적 목적에 두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통일은 대박’이라는 박근혜 정부의 통일에 대한 시각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통일의 목적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변화는 통일정책의 수립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미래 통일세대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의 의식구조는 통일정책에 중요한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청소년들의 의식구조가 기성세대와 달리 ‘우리’보다는 ‘나라’는 문화에 익숙하며, 개인주의적 의식이 높은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개인적 이해득실에 영향을 주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어 통일문제와 같은 ‘우리’의 문제는 큰 관심을 보이고 있지 않다. 따라서 사회통합을 위한 통일정책은 정체(政體)라는 체제적·구조적 통합의 방식보다는 생활 속에서 상호소통에 기초한 정체성문화적 통합방식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2. 통일정책의 변화

통일된 대한민국은 보편의 측면에서는 선진복지국가 수준의 다양성과 인권이

38) 변중현, “20대 통일의식과 대학 통일교육의 과제.” 『통일정책연구』 제21권 1호, 2012, p. 166.

보장되고, 특수 측면에서는 남북한 분단의 상처를 치유하며 통일과 화합을 이루는 공동체³⁹⁾이어야 한다. 따라서 남북한의 소통증대와 북한의 점진적 변화를 통한 제도적 동질화를 바탕으로 보다 나은 정치·경제·사회적 통일자본이 형성되어야 한다. 단순한 공존이나 소통이 아니라 지속적인 통합역량 증대를 위해 우리가 지향하는 민족공동체 통일을 실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통일에 대한 인식변화를 비롯한 통일 환경 변화에 대한 고려가 통일 정책에 반영되어야 한다.

앞서 지적하였듯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통일은 경제적인 문제와 연관하여 사고하고 있다. 통일이 한국경제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예측으로 인해 막대한 통일비용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고 있고, 통일이 남한의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생각에 통일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고 있다.⁴⁰⁾ 그러나 남한이 추구하는 통일정책이 급진적 통일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점진적인 통일방식이라면 비록 통일이 대박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통일과 경제를 모두 살릴 수 있는 방안이 존재할 것이다. 이와 함께 현실적 측면에서 통일방안은 남북한의 교류와 협력만큼 한중, 한미, 한일 교류협력에 중요하다. 동북아시아의 협력체계 안에서 남북한의 통일과 통일문제가 논의되어야 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특히 중국의 국력신장과 적극적인 한반도 개입은 한반도 개입이 단순히 남북한의 타협을 통해서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동북아의 복합적 네트워크 속에 북한을 편입시키는 방식으로 통일이 진행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⁴¹⁾ 이런 점에서 통일정책은 한반도 통일논의와 지역통합이 연계되는 방향으로 사고의 폭을 넓히는 대안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

39) 박영자, “다문화시대 한반도 통일통합의 가치 및 정책방향: 상호문화주의의 시각과 교훈을 중심으로.” 『국제관계연구』 제17권 제1호, 2012, p. 320.

40) 박광득, “통일교육의 역할과 효과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향 연구.” 『통일전략』 제14권 제1호, 2014, p. 133.

41) ICG(International Crisis Group), Shades of Red: China's Debate over North Korea. International Crisis Group Asia Report 179 (November 2, 2009)참조. ICG(국제위기그룹)는 2009년 하반기에 북한의 경제군사적 안정화를 통한 비핵화라는 정책결정을 내리고 적극적인 한반도 개입을 시작했다고 분석하였다 (ICG, 2009).

이와 함께 한반도 통일의 과정에서 인권, 난민, 환경, 경제 등과 관련해서 NGO가 기여할 수 있는 역할들이 존재한다. 한반도에 참여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주변 강대국들보다 NGO가 통일한국에 훨씬 더 우호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NGO가 통일기반 조성과정과 남북한의 통합과정에서 정치, 외교, 군사, 경제 문제 등 전통적 이슈들뿐만 아니라 인권, 난민, 환경, 개발협력, 문화 등 비전통적 이슈들에 대해 활발한 활동을 해 오는 과정에서 다양한 경험을 축적해 왔다.⁴²⁾ 따라서 남북협력에 기초한 통일정책은 국제 NGO와 국제기구를 활용한 대북지원이나 개발협력 사업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는 한반도의 분단이 남북한 이념대립의 결과물이 아니라, 당시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치의 결과물이기에 한반도의 통일 또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인정이 없다면 불가능하다. 따라서 한반도 통일은 시민사회 간 초국가적 네트워크의 확립을 통한 지지에 바탕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통일정책의 변화에 고려해야 할 것이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통일은 통합의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다. 제도적·정체적 통합과정으로서 기존의 논의들과 함께 우리는 통일 이후 사회통합의 방식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 전우택 외⁴³⁾에 의하면 북한이탈주민이 한국에서 받는 문화적 충돌은 북한이탈주민의 거센 억양과 한국의 빈번한 외래어·외국어의 사용으로 인한 언어 충돌, 가부장적 사고방식과 생활습관이 많이 남아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의 상대적인 양성평등 문화를 접했을 때 받는 문화충격 그리고 자녀의 교육방식과 향락적 소비문화에서 이질감을 느끼는 것을 나타냈다. 북한이탈주민이 한국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문화적 충돌은 통일 이후 사회통합과정에서 직면하게 되는 문제들이다. 1995년 시사주간지 슈피겔(Der Spiegel)에는 동독주민의 67%가 “장벽은 사라졌으나 머

릿속의 장벽은 더 높아지고 있다”라고 대답하였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실렸다. 그리고 베를린 사회과학연구센터가 펴낸 ‘1999년 사회조사 보고서’에서 1999년 현재 약 74%의 동독주민들이 여전히 구동독에 대해 강한(27%) 또는 상당한(47%) 결속감을 보인 반면, 통일 독일에 대해 결속감을 느끼는 동독주민은 고작 47%에 불과하였다. 1999년 발표된 한 설문조사는 자신을 통일 독일의 국민이라고 느끼는 동독인은 불과 17%에 지나지 않는 반면, 11%는 다시 동독 시절로 돌아가기를 원했고, 65%의 동독 주민들은 동독도, 서독도 원치 않는다고 답했다. 동독 주민들은 급기야 통일을 ‘부드러운 점령’에 뒤이은 ‘내부 식민화’의 과정으로 여기고, 자신들을 통일 독일의 ‘이등국민’이라고 자조하기에 이른 것⁴⁴⁾이라고 지적한다.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방향은 다수에게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일반적 공공 문화/제도의 유지와 여러 문화/제도들의 갈등·쟁투·소통·합의 과정에서 수렴과정을 거쳐 만들어 내는 새로운 문화 및 제도들에 의해 뒷받침된다. 따라서 한 공동체 내에서 나와 함께 어울려야 하는 타자 역시 나처럼 생존을 위해 허덕이고 상처받으며 기뻐하고 미래를 꿈꾸는 또 다른 나라는 의식이 형성되어야 한다. 한 공동체 내에서 ‘나와 같음과 다름’을 지니고 있는 타자와의 상호작용이 사회통합의 핵심 과제가 되어야 한다. 다양성과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는 여러 개인과 집단 문화가 펼쳐져 있는 현상적인 전시(展示)사회가 아니다. 각 개인과 문화집단들의 차이가 구체적 생활과 의식 속에서 상호작용하면서 맺어지는 다양한 관계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사회이다. 같은 공간에서 함께 의식주와 희노애락(喜怒哀樂)을 경험하는 타인들과 함께 하는 어울림의 사회이다.⁴⁵⁾ 통일정책은 이처럼 제도적·환경적 변화에 맞추어 사회통합의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그것은 기존의 이념적·정체적 대결의 방식으로서 이념적·보편

42) 김성한문경연, “한반도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비정부기구(NGO)의 역할: 대북지원 NGO와 북한 인권 NGO를 중심으로.” 『국제관계연구』 제19권 제1호, 2014, p. 154.

43) 전우택·유시은·이연우, “북한이탈주민의 국가정체성 형성과 유형: 근거이론에 의한 분석.” 『통일정책연구』 제20권 제2호, 2011.

44) 최승호, “북한 새터민에 대한 사회통합 방안-독일사례를 바탕으로.” 『정치정보연구』 제13권 제1호, 2010, p. 173.

45) 박영자, “다문화시대 한반도 통일통합의 가치 및 정책방향: 상호문화주의 시각과 교훈을 중심으로.” 『국제관계연구』 제17권 제1호, 2012, p. 321.

적 대립의 극복의 방식이 아니라 생활적·구체적 소통의 방식이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통일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삶의 영역의 일그러짐을 어떻게 최소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가치통합을 이루어 낼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민족주의 또한 단순히 정적으로 규정된 개념이 아니라 역동적으로 구성되고 창안될 수 있는 존재이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와 다른 그들의 신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차이 그 자체를 존중하고 다른 것과의 공존을 수용하는 태도를 양성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한반도를 삶의 공간으로 삼는 다양한 부류의 구성원 모두에게 새로운 활력과 신뢰를 가져다 줄 수 있는 통일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V. 결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통일의 방식에 대한 고민에 대한 많은 해답을 독일 통일방식에서 찾을 수 있다. 1989년 10월 18일 동독 호네커 정권이 실각하고, 1990년 3월 18일 자유총선거를 실시하고, 5월 18일 화폐·경제·사회통합에 관한 국가조약을 바탕으로 10월 3일 통일되었다. 영국, 미국, 소련, 프랑스에 분할 점령되고, 1949년 5월 23일 기본법 공포로 분단된 독일은 통일을 통해 40여 년의 분단경험을 단 1년 만에 치유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독일 또한 1955년 할슈타인 원칙에 기초한 체제경쟁이나 시장경제에 기초한 이념경쟁에서 동독과 대립하였고, 그 결과 동독과 서독의 정체의 통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의식과 삶 속에 각인된 경쟁과 대립의 결과는 생활적 균열로 드러나고 있다. 더구나 무슬림을 포함한 이주민들을 함께 통합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독일은 그동안 경제사회적으로 상당한 진보적 결과를 도출한 정책들이 있었음에도 사회적 균열은 쉽게 줄어들고 있지 않다.

1990년 동독과 서독의 정체를 통일한 이후에도 독일의 분열은 체제로 드러나

는 중앙권력은 주민들의 생활에 직접 관여하는 지역조직이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기능만 수행하는 분산적 사회모델과 제한된 결합정책 즉 보완원칙(principle of subsidiarity)을 실시함으로써 일정정도 사회통합의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⁴⁶⁾ 이 뿐만 아니라 민족 정체성의 상실감을 드러낸 동서독 주민을 위해 사회적 연대를 형성하고 상호작용을 요구하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특히 고용과 교육을 중심으로 노동과 직업생활에서의 통합을 위한 교육통합 정책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모든 사회영역은 지역에서의 동등한 진입을 보장하고 평등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제도적 통합을 넘어서는 생활 속에서의 사회적 통합을 통해 공동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시민적 의식을 고양함으로써 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이는데 개방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게 만들었다.

세계체제의 이념대립의 과정에서 분열된 독일과 한국의 역사적 경험은 이념 경쟁에 기초한 체제경쟁은 권력의 정당성이라는 근본적 갈등의 형식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한국의 경험에서도 남북한은 냉전체제 속에 서로 다른 진영에서 정치·문화·경제·사회적으로 예측됨으로써 상호분열은 심화되었고, 이를 통해 민족적 동질성과 정체성은 정체적 대립 속에서 부차적인 내용이 되어 버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에서 통일은 분단된 민족의 재통합을 의미하는 민족주의에 기초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경제적 경쟁을 통한 동질성과 정체성의 분열과 함께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다문화현실은 이러한 민족주의가 극복하여야 대립이념으로 전제되고 있다.

이 연구를 통해 제시하는 생활의 통합으로서 통일의 방식은 단일성의 회복으로서 이념과 정체의 통일이 지향하는 대립과 극복의 방식이 아니라 다양성의 추구를 통한 삶의 영역으로서 생활의 통합이 지향하는 화합과 공존의 방식을 제시하고자 한다. 민족주의와 다문화주의 또한 개념적 영역에서는 서로 대립되고 극복되어야 하지만, 구체적 삶의 영역에서 다문화주의와 민족주의는 다양한

46) Silver, Hilary, "The Social Integration of Germany since Unification." *German Politics and Society*, Issue 94, Vol. 28, No. 1 (Spring 2010), p. 165.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복수성의 개념이다. 물론 민족적 단일성과 동질성에 대한 대안으로 제기되는 다문화주의가 문화적 차이와 민족 간 분리를 극복한 새로운 질서를 창조하기 보다는 차이와 분리가 공식적으로 심화되는 결과를 낳을 가능성도 있다⁴⁷⁾는 지적을 감안하더라도 삶의 영역에서의 다양성과 삶의 방식의 복수성은 개념적 단일성으로 수렴되지 않는 다양한 가능성을 담고 있다.

현실적으로 '민족공동체'는 다양한 문화, 관습, 개성을 민족이라는 하나의 개념에 종속시킬 위험도 있다. 특히 단일개념으로서 민족개념으로는 제외동포를 민족으로 바라보는 지점에서는 중국의 소수민족으로서 조선족, 일본의 재일동포, 러시아의 고려인의 다양한 삶의 모습과 국적을 담아낼 수 없을지 모른다. 그러므로 오늘날 민족의식은 단일민족의 개념적 지향을 넘어 다양한 문화를 포용하는 열린 민족공동체를 지향하는 개념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그것은 혈연적 민족에서 운명공동체로서의 민족, 삶의 공간에서 소통의 경험을 통해 형성되는 동일한 정체성, 그리고 유대와 연대를 통해 형성되는 민족에 기초한 민족공동체 개념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국제적 환경변화에서도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국들은 남북한의 평화공존이라는 현상유지를 선호한다. 남북한의 분단 상황에서 형성된 국제질서와 힘의 균형은 한 체제의 붕괴에 따른 힘의 불균형과 이에 따른 위기상황을 바라지 않는다. 따라서 국제사회의 요구수준에서도 대립과 극복이라는 급속한 변화와 위기를 초래하는 통일방식보다는 현실적으로 남북한이 공존할 수 있는 형태의 통일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이는 기존의 남북통일방안에서 제시되는 정치적 통일의 방식이 아니라 생활영역의 통합과정으로서 통일방식으로 전환을 요구하는 것이다. 또한 통일에 대한 의식변화에서 볼 수 있듯이 이념과 체제보다는 생활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시대변화 또한 생활영역의 통합과정으로서 통일을 요구하고 있다.

통일의 형식으로 지향해야 하는 사회통합은 제도적법률적 통합으로서 체제통합이 아니라 사회생활영역의 통합과정으로서 가치통합을 통해 이루어진다. 생활적 통합의 방식이 형식적 통합 이후에 발생하는 새로운 가치의 수용과정에서의 배제와 소외를 극복하고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가치를 형성하는 실질적 통합의 길이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의 연장에서 생활의 통합으로서 통일의 방식은 이념과 정치적 대립과 극복의 방식으로서 통일이 아니라 삶의 영역에서 구체적 생활을 통해 드러나는 소통과 교류에 기초한 통일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것은 민족이라는 개념적 회복이 아니라 삶 속에 드러나는 민족이라는 개념의 형성에 주목하고, 제도와 이념의 규제가 아니라 생활 속에서 형성되는 이념과 제도에 주목한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의 통일정책은 북한의 체제변화를 우선하기보다는 상호소통의 영역을 확대함으로써 붕괴의 위협보다는 변화의 필요성에 기초해야 한다. 그리고 생활세계의 중첩적 확대를 통해 동일성의 회복이 아니라 유사성의 확대에 기초한 통일정책이 다문화사회 한국의 통일정책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47) 김경은·윤노아, "청소년의 국민정체성, 통일, 다문화수용성에 대한 인식-다문화시대 사회과 통일교육에의 함의." 『사회과교육』 제51권 제1호, 2012, p. 137.

참고문헌

고길실, 『소수문화들의 정치학』, 서울: 문화과학사, 2000.

고상두, “통일 이후 사회통합 수준에 대한 동서독 지역주민의 인식.” 『유럽연구』 제28권 제2호, 2010.

고성호, “통일한국의 사회체제와 사회통합에 관한 연구.” 한국문제연구원(편) 『한반도 통일론: 전망과 과제』, 서울: 건국대학교 출판부, 1997.

김경은·윤노아, “청소년의 국민정체성, 통일, 다문화수용성에 대한 인식-다문화시대 사회과 통일교육에의 함의.” 『사회과교육』 제51권 제1호, 2012.

김광역, “다문화주의의 시각.” 『현대사회와 인권』, 서울: 나남출판사, 1998.

김남국, “다문화시대의 시민: 한국사회에 대한 시론.” 『국제정치논총』 제45집 4호, 2005.

김병로, “통일환경과 통일담론의 지형변화-정부통일방안을 중심으로.” 『통일문제연구』 제26권 제1호, 2014.

김성한·문경연, “한반도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비정부기구(NGO)의 역할: 대북지원 NGO와 북한 인권 NGO를 중심으로.” 『국제관계연구』 제19권 제1호, 2014.

김용신, 『다문화교육론 서설』, 과주: 이담, 2009.

박광득, “통일교육의 역할과 효과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향 연구.” 『통일전략』 제14권 제1호, 2014.

박명규 외, 『2013 통일의식조사』, 서울: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3.

박명규, “남북관계와 비대칭적 분단국체제론.” 『통일과 평화』 창간호, 2009.

박명규, “다문화주의와 남북관계: 이론적 쟁점과 현실.” 『국제이해교육연구』 제4권 제2호, 2009.

박영자, “다문화시대 한반도 통일통합의 가치 및 정책방향: 상호문화주의의 시각과 교훈을 중심으로.” 『국제관계연구』 제17권 제1호, 2012.

박이문, “문화다원주의 타당성과 한계.” 『철학과 현실』 제52호, 2002.

박종철·김병로 외,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새로운 접근과 추진방안: 3대 공동체 통일구상 중심』, 서울: 통일연구원, 2010.

변중현, “20대 통일의식과 대학 통일교육의 과제.” 『통일정책연구』 제21권 1호, 2012.

성장환, “역대정부의 통일정책 검토와 이명박 정부의 통일정책 변화방향.” 『국제정치연구』 제14집 제2호, 2011.

송재룡, “다문화주의와 인정의 정치학, 그리고 그 넘어: 찰스 테일러를 중심으로.” 『사회이론』 제35호, 2009.

오형훈 외, 『취약계층 평생직업 훈련의 사회통합효과분석』,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0.

이용재, “다문화사회개념에 대한 고찰.” 『다문화와인간』 제1권 1호, 2012.

전우택·유시은·이연우, “북한이탈주민의 국가정체성 형성과 유형: 근거이론에 의한 분석.” 『통일정책연구』 제20권 제2호, 2011.

정광호·김민영·금현섭, “탈북자치원정책의 새로운 이해-문제정의의 관점에서.” 『한국정책학회보』 제19권 1호, 2010.

조찬래 외, 『남북한통합론』, 서울: 대왕사, 1998.

차재호, “남북한 문화통합의 심리학적 고찰.” 『북한문화연구』 제1권, 1993.

최 현, “한국인의 다문화 시티즌십(multicultural citizenship): 다문화 의식을 중심으로.” 『시민사회와 NGO』 제5권 제3호, 2007.

최성환, “다문화주의의 개념과 전망: 문화형식(이해)의 변동을 중심으로.” 『철학탐구』 제24호, 2008.

최승호, “북한 새터민에 대한 사회통합 방안-독일사례를 바탕으로.” 『정치정보연구』 제13권 제1호, 2010.

추병완 외, 『윤리학과 도덕교육』, 고양: 인간사랑, 2000.

추병완, “다문화사회에서 학교통일교육의 새 활로.” 『교육과정평가연구』 제14권 제1호, 2011.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월보』 (2014년 9월), 2014.

홍기준, “통일 후 남북한 사회통합: 새로운 이론구성을 위한 시론.” 『국제정치논총』 제39권 제3호, 1999.

Brubaker, Rogers, *Citizenship and Nationhood in France and Germany*.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92.

Bell, Daniel, *The Cultural Contradictions of Capitalism*. New York: Basic Books, Inc., Publishers, 1978.

ICG(International Crisis Group), *Shades of Red: China's Debate over North Korea. International Crisis Group Asia Report 179* (November 2, 2009).

Silver, Hilary, “The Social Integration of Germany since Unification.” *German Politics and Society*, Issue 94, Vol. 28, No. 1 (Spring 2010).

Storey, John, *Cultural studies and the study of popular cultures: theories and methods*. Edinburgh: Edinburgh University Press, 1996.

ABSTRACT

Korean unification as a multi-cultural society

: From the political frame of unification to integration in the social life

Lee, Young-Jea(Catholic University of Daegu)

The reflection on Universality reveals the new desire for diversity. Despite the boundary of the nation state decreasing, the ethnic concept is still valid. Today, the debate about integration in a multi-cultural society will demand, not ethnic homogeneity, but the integration of solidarity is based on diversity and heterogeneity. And this phenomenon affects the perception of people about Korean unification. The change of the international situation, of the people's awareness for unification and of the social structure is toward a Multi-Cultural society, because the integration policy in their lives became more important. As the apathy of the young generation on the part does not affect his life, and the sensitivity of the young generation on the part of safety and stability in their lives, they do not care about ideological issues. The new unification policy is not the way of overcoming the conflict of ideology but the way of communication and acceptance in the life. Therefore, the Korean unification policy should be offered the new way of integration in the multi-cultural society.

Keywords : Multi-Cultural society, unification policy, unification education,
the unification of political frame, the integration of the life world

투고일 : 2014년 10월 29일, 심사일 : 2014년 11월 28일, 게재확정일 : 2014년 12월 2일